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 http//www.mke.go.kr

문의 : 기술규제서비스과 박영삼 과장(010-9985-3063), 유중현 주무관(010-6397-9029)

해외 기술장벽 허물려면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해야

- 기술표준원,「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」활동 분석결과 발표 -

□ 최근 미국, 유럽,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대·강화되고 있는 **해외 기술 장벽을 허물려면 국내 기술규제부터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할 필요**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

o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**지난 15년간의 WTO 무역기술장벽(TBT)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**하면서,

※ 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

o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, 유럽 등이 도입하려는 **무역제한적인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**하고 있는 반면

o **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문제 제기도** 강화되고 있어 **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사전에 정비**하고, 유관부처간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

□ WTO 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'10년 **총 6건의 무역 제한적인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평균 2.2회(총 13회)의 문제를 제기**

o 미국의 **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제**(3회) 및 **에너지스타 인증규제**(2회), EU의 **RoHS 규제**(3회), EU **인정제도 규제**(1회), 인도 **타이어 규제**(2회), 캐나다의 **에너지효율 규제**(1회)에 대해 문제제기

※ '05년 1건(3회), '06년 4건(8회), '07년 2건(4회), '08년 7건(9회), '09년 8건(8회)

□ 반면, 금년도에 미국, 유럽 등 **타 WTO 회원국으로부터 총 3건(총 6회)의 우리나라 기술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**가 있었음

o 농림부의 **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**(3회)에 대해서는 **인증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도가 중복 운영**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

※ 농림부는 각국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제도시행시기를 2013년 이후로 연기하고 인증범위 등을 재조정하고 식약청 제도와 통합운영키로 함

o 지경부의 **박막태양전지 인증제도(2회)**에 대해서는 미국의 **경쟁 기술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문 제기**

※ 동 인증제도는 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이며, 미국측이 요청하는 비실리콘계(카드뮴 등)는 환경문제에 대한 검증 필요

o 환경부의 **자동차온실가스 규제(1회)**에 대해서는 **미국 및 유럽의 대형차 제조업체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**함

※ 우리나라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안은 미국 및 유럽의 규제안을 기초로 설계되었으며, 관련 국가들 보다 규제강도가 높지 않음

□ 국내 **TBT중앙사무국을 운영**하고 **WTO TBT위원회의 우리나라 대표로 활동**하고 있는 지식경제부(기술표준원)는 외교통상부, 농림수산식품부,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,

o 우리나라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**외국의 부당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대응**을 지속하는 한편,

o **우리나라의 합당한 기술규제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제고**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, **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의 사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**

【참 고】

WTO TBT위원회 활동결과 분석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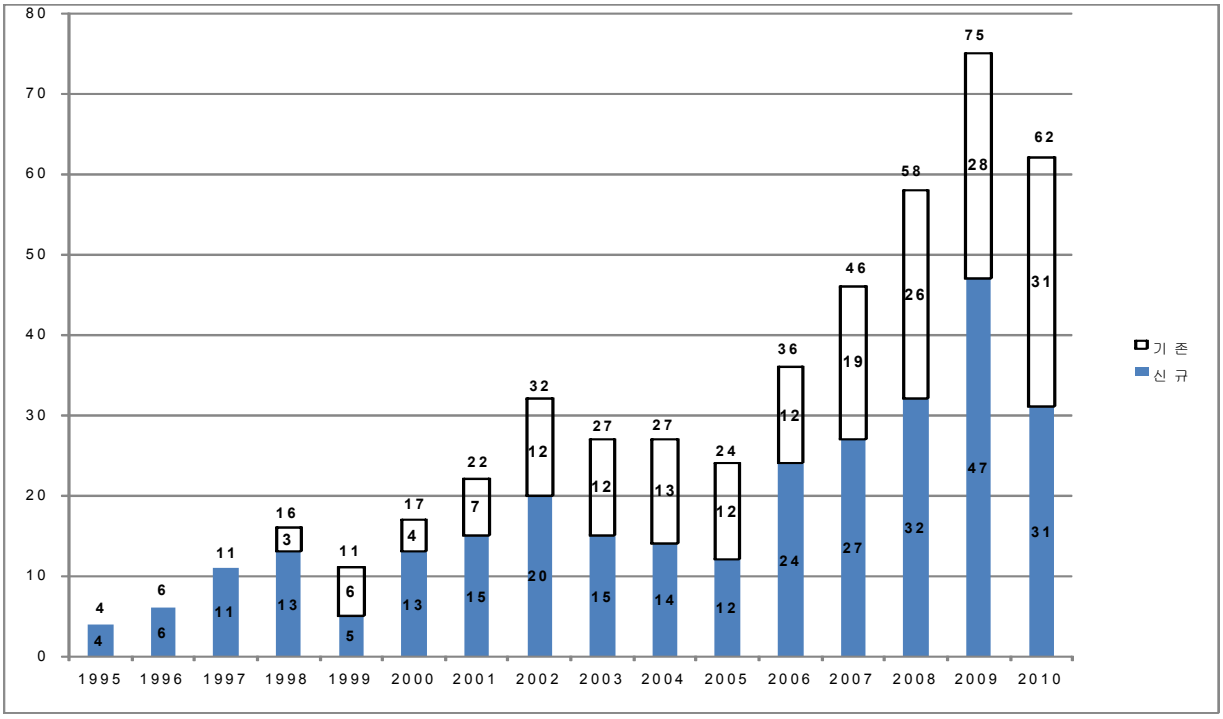
□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전체 회원국들의 기술규제,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조치수가 증가 추세를 보임

o WTO/TBT위원회에서는 연 **3회**(3,6,11월) ① **WTO에 통보된 기술규제**, ② **통보되지 않았으나 현재 시행중인 조치들** 중에서 **무역저해적인 규제들을 의제화하여** 회원국간 **의견을 교환**하는 장*을 마련하고 있음

* 특정무역현안(Specific Trade Concerns, STC)이라 명명
STC(신규/기존 STC 중복) 수 : 36건('06) --> 46건('07) --> 58건('08) --> 75건('09) --> 63건('10)

- 동 위원회 개최기간 동안 각국은 **양자·다자회의**를 통해 **무역저해적 규제**들에 대해 **의견을 제시**하고 **기술장벽해소**를 통한 **무역촉진**을 위해 국가간 협상 기회를 가지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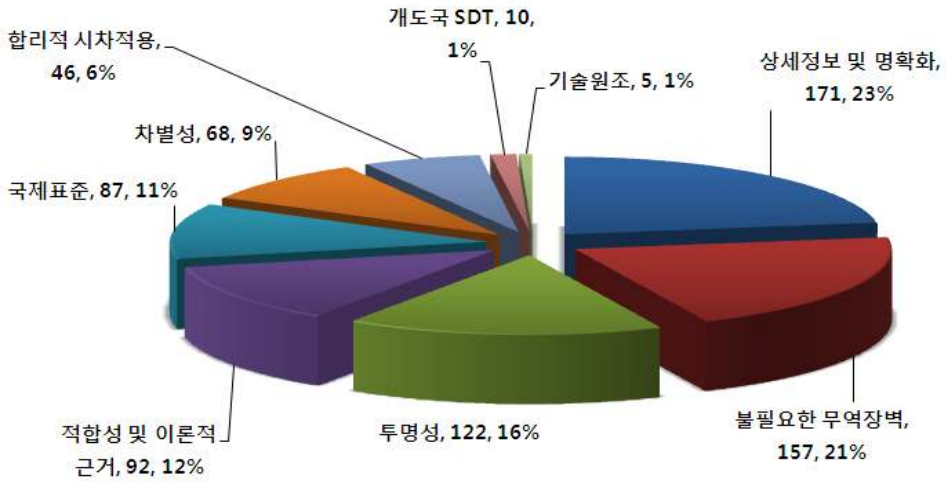
o WTO 출범(1995년)이후, '10.10월까지 총 제기된 STC 건수는 **271건**으로 **WTO에 통보된 기술규제**가 약 **70%**를 차지



□ 회원국들의 특정무역현안 문제제기 사유는 ① **상세정보 및 명확화** 요청 (171건), ② **불필요한 무역장벽** 야기 (151건), ③ **규제 도입시 투명한 절차** 요청 (122건), ④ **적합성, 이론근거** 요청(92건), ⑤ **국제표준과의 조화** 요청 (87건), ⑥ **차별적** 규제 (68건) 등 무역저해적 성격의 규제들에 대한 의견 상당수

o 또한, **5회 이상**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은 32건(12%)이며 주로 **EU의 REACH, RoHS/ WEEE, 와인규제, ATP&CLP** 그리고 **인도의 타이어 규제** 등이며 EU의 환경관련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논란

* 1~2회 제기(174건/64%), 3~4회건(65건/24%)



□ **국가별** 제기받은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**EU가 60건으로 1위, 중국** 32건, **미국** 30건, **우리나라**가 19건 순으로 4위



o 반면, **지역별 특정무역현안** 분포는 **아시아**(104건, 38%), **유럽**(69건, 25%), 북미(45건, 17%), 중남미·캐러비안(35건, 13%), 중동(11건/4%), 아프리카(8건/3%)로서 지역별 통계치 분석시 아시아의 기술규제가 가장 큰 논의거리가 되고 있음.

□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규제들의 **도입 목적**은 ① **인간의 건강/ 안전 보호**(109건), ② **미지정**(64건), ③ **환경보호**(57건), ④ 기타(49건), ⑤ **소비자 정보 및 라벨링**(41건), ⑥ **기만적 행위 방지**(41건), ⑦ **품질**(23건), ⑧ **안보**(7건), ⑨ **동·식물 건강**(4건)로 정당한 목적을 내세운 규제들이 많으나 회원국이 밝힌 정당성의 무게감보다 무역저해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(비용적, 시간적)가 더 큰 것으로 관찰됨

